



세계타임조

세계타임즈몰

☎ 대표전화: 1661-8385 www.thesegye.com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제 3249호〉

이재명 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돼 저질 정당 현수막은 철거도 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 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 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

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외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

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 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 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 주문…"법 악용되면 고치거나 없애야"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도…"민사로 해결할 일

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 탓에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에 담 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 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 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 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 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F 있다는 결도 있다고 시작됐다.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 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 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 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 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 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 교사절 행사를 소화한 뒤 직원들에게 '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 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 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 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 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 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채봉 기자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 "5호기 매몰자 구조작업 재개"

이틀 만에 다시 구조대 투입…현재 매몰 4명 중 사망 추정 2명・실종 2명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 색에 장애를 줬던 보일러 타워 2기가 11일 발파 완료되면서 매몰자 수색·구 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수색·구조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가 있는 지점부터 절단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색 작업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조대는 일단 안전이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수색에 돌입하고, 크레인을 활용해 안전 작업 지대를 확보해가면서 수색 반경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5호기 상부 고정을 위한 400t급 크레인(기중기) 등이 대기 중이다.

소방 당국은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이 투입되는 수색 활동이 4·6호기 발파 준비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 (발파 시 한 번 무너뜨리기 위해 기둥 등을 잘라내는 것) 때문에 지난 9일 중단된 이후 이틀 만에 재개된 것이다.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이 중 사망 추정자 2명은 각각 잔해물 입구 3~4m 와 4~5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작업은 이들 사망 추정자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범 위를 확대하면서 진행한다. 구조견과 매몰 탐지기 등도 동원된다.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선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가로 25m, 세 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 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 난 9일까지 매몰자 7명 중 3명의 시신 을 수습했으나 5호기 양옆에 30m 간격 으로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추가 붕 괴 가능성 때문에 중장비 사용이 제한 되는 등 본격적인 수색에는 난항을 겪 었다.

11일 낮 12시께 4·6호기가 발파돼 장 애 요소가 사라지면서 수색·구조 작업 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장성 기자

'종묘 앞 재개발' 공방···"吳 선거도구 악용"·"숲총리 띄우기"

민주 "吳, 5선 도전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 훼손"···국가유산청 '패싱' 비판도 국힘, '개발반대' 문체장관에 "대법 판결 뒤집겠다는 발상···지방선거 개입"

여야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의 세운4구역 부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 서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근거가 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아무리 서울 시가 도시계획 권한이 있다고 해도 세 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며 "유네스코에서 보존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세계유산 등재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 고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 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김건희가 종 묘를 카페로 유용하더니 이젠 오 시장 이 종묘를 자신의 선거 도구로 이용하 고 있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한 강버스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 로 재개발 사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 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절차 없이 도시계획을 단독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재협의 절차 도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 계유산법에 의무화돼있는 세계유산 영 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단독으 로 계획을 변경·고시한 행위는 절차적 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7일 최 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의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적법하다 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심귀영 기자

